

출판계도 개혁과 自淨 바람 거세게 분다

중복출판 채택료 부조리 등 고질병 척결 본격적으로 나서

‘한국병의 치유’란 기치 아래 대대적인 사정 개혁이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요즘의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출판계가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다. '93 서울도서전의 개막일인 지난 5월 7일 ‘책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낙준)가 “책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를 위하여”란 제하의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자정운동의 첫삽을 뜨고 나선 것이다.

물론 그동안 출판계의 치유되지 않고 있는 고질병이 몰랐던 비밀사항도 아니었고,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일부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번에 조직위에 의해 추진된 정화운동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출판계가 공동으로 체계적 방안을 마련, 조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데 있다. 조직위가 개혁과제로 열거한 출판계의 암적 요소는 ▲음란퇴폐 저질도서출판과 ▲중복출판 ▲로열티를 천정부지로 올려 외화를 낭비하는 번역계약 과당경쟁 ▲교육계와 출판계를 도덕적으로 명들게 하는 채택료 부조리 ▲독자를 우롱하는 과대 과장광고로 요약된다.

출판계의 발전과 출판문화의 정착을 방해하는 바로 이같은 폐단을 책의 해를 기해 송두리째 추방하자는 게 조직위의 결연한 의지로, 뿌리깊은 병폐인 만큼 업계 전체의 의지를 집약해 추방코자 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조직위는 전국서점조합연합·잡지협회·인쇄문화협회 등의 유관단체와 문화체육부·교육부 등 정부기관, 그리고 독서운동단체·언론계의 협조를 받아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직위의 상임이사인 윤청광씨(동국출판사 대표)는 “책의 해를 통해 이제껏 손을 대지 못했던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건전한 출판풍토를 육성하려는 게 이번 자정운동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이에따라 조직위는 각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일반민화의 무분별한 출판 등 저질 퇴폐출판물 범람의 문제는 이미 사법당국이 강한 척결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조기에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30일 제4차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음란출판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구속, 출판물 압수, 판매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골자로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결정

출판계가 이른바 ‘고질병’으로 방치해온 중복출판과 채택료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한 자정운동의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알면서도 환부에 칼을 대지 못했던 출판계의 5대 문제점을 개혁 열풍과 책의 해 ‘기념’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협과 조직위는 대책위원회 구성과 세미나 개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라도 저질 퇴폐출판물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복출판 방지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상업성만을 지향해 출판윤리를 해치는 중복출판의 경우, 조직위는 출협의 이사회를 통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즉 중복출판을 상습적으로, 혹은 ‘전문적’으로 일삼는 출판사들을 조사해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심판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중복출판의 대부분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다. 현재 일부 서점들이 실시하고 있는 중복출판물 안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동종의 책이 무려 수십종씩 서점에 진열될 정도로 심각한 중복출판의 현상은, 최근 출협의 조사에 의해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출판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로 무려 63개의 출판사가 중복출판한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20개 이상의 출판사가 앞다투어 중복출판한 책이 조사된 것만도 17종이 넘어 가뜰이나 비좁은 매장 때문에 속병을 앓고 있는 서점의 고민을 더해주고, 독자에게는 큰 혼란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들어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번역저작권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조직위는, 경쟁을 부추키는 저작권에이전시의 사법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강한 제재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과다한 번역경쟁은 국내출판사들의



출판계 중복출판 등 만연된 고질병 치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동시에 외화를 낭비한다는 차원에서 개혁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 3년 전만 해도 우리 출판시장 규모에 비해 조금 적다싶게 지불되던 로열티가 이제는 더 큰 규모의 시장을 갖는 외국보다 오히려 많이 지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의 무명소설가의 첫작품이 무려 20만달러(한화 1억6천만원 상당)에 계약돼 출판가의 관심을 모은 적도 있다. 이 경우처럼 최근의 저작권계약은 ‘신기록 경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출판계가 자체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의 과도한 경쟁이나 중복출판, 음란 퇴폐출판물 범람이 출판계에 국한된 문제라고 좁혀 말할 수 있다면, 채택료 부조리는 교육계와 출판계 공동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위는 관련단체들과 보조를 맞춰 조속히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때마침 다행스럽게도 채택료 부조리는 학습자료협회(회장 임홍조)와 한국대학교출판협회의(회장 배효선)의 ‘근절 결의’로 조만간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대학교출판협회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협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교출판사들의 자체윤리규정을 마련, 채택료 근절운동을 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형화 치달는 출판광고 주제 세미나 개최

채택료 부조리가 이같은 자구노력에 의해 이미 정화의 가능성을 예상케하는 것과는 달리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이면서도, 해결의 열

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책의 과대 과장광고. 그런만큼 조직위도 이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광고의 비합리적인 대형화는 출판계를 공멸의 단계로 몰아가는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이다.

최근의 출판계 불황을 가리켜 “훈민정음 창제 이래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는 자조적인 우수개소리가 나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출판광고량은 ‘급성장’해, 지난해에는 50%에 가까운 성장율을 보이기도 했으며, 신문은 비롯한 인쇄매체에 국한됐던 책광고가 전파매체로 옮겨가며 대형화되고 있다. 또 신문광고 역시 5단통에서 7단통으로까지 대형화를 ‘미덕’으로 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TV광고를 할만큼 출판계가 성장한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몇백원의 마진을 얻는 책광고를 대기업체도 조심스러워 하는 지면에 살고 있다”는 광고무익론이 제기되고 있어, 조직위는 오는 7, 8월경에 비대해지는 출판광고 주제토론회 세미나를 열어, 무분별한 TV광고 금지대책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책의 해를 변혁의 계기로 삼고자 조직위가 제시한 이상의 개혁방침은 일단 미온적이던 종전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정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꼭 사회적 분위기와 책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출판계의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 이번엔 제기된 문제점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 출판인의 말처럼 “전시용 제스츄어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출판풍토의 쇄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바란다.

—최태원 기자